

# 차 100만대 기지 주춤... '광주형 일자리'는?

### 광주시 "예타결과는 보류·불가아닌 보완 요청한 것"

### 국회 내년 사업비 반영 힘들어 예산확보 주력해야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청년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역점 추진 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면서 주춤하게 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4일 "2차 예타 결과는 보류 및 불가 아니라, 보완을 요청해온 것으로 현재 진행형"이라며 "사업은 노란불에서 파란불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업 성사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려 한 것인데, '일단 멈춤' 신호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예타 조사 통과 여부 결정이 내년 2월 점검회의로 넘어간 탓에 국회의 내년 새해 예산심의에서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한 사업비 반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요구한 내년 예산 353억원 전액은 커녕 사업 착수에 필요한 상징적인 예산조차 반영되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여야 공동의 지원의지, 예타 통과 없이도 예산이 반영된 사례 등을 근거로 예산확보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기재부의 '보완' 요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재부가 예타에 윤장현 시장의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토록 한 점이 근거가 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수준인 적절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사 관계 재정립, 원·하청 격차 해소, 근로조건 향상,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핵심이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가 현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인 임금체제 개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타에 '광주형 일자리'를 주요 평가 요소로 포함하도록 내용 보완을 요구한 것은 광주에 사실상 노동개혁 실험을 해보자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가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매우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에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 등이 어느 정도 교감이 되질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연말 안에 독립법인 모델을 제시하고 그 법인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와 자동차 업계의 투자에 시민주 공모가 더해져 노사가 함께 경영하는 법인 형태로 일본 기타큐슈와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100만대 생산기지를 가동할 '엔진'은 국내의 자동차 업계의 투자유치다. 윤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시의 사업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국 자동차 업체도 전북 새만금을 살펴보면서 광주도 함께 찾아서 조건과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획재정부의 보완 요구로 이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 '전기자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 인프라 구축' 등 투톱 체제를 갖추게 됐다. 다만 일자리 창출 비중이 커지면서 100만대 생산을 위한 외형 투자가 축소돼 본말이 전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점검회의에서 사업명 가운데 '100만대'를 제외하는 안이 거론된 것도 생산 목표량 축소를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윤 시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하겠지만 3차 점검회의에서 필요에 따라 사업명을 바꿀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적극 추진했던 사업이 대폭적인 규모축소와 함께 1년 더 늦춰지게 됐다"며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노동개혁과 청년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부는 가장 착한 선물입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는 24일 목포시 옥암동 도청 진입로 사거리에서 '희망 2016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사랑의 행복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구호로 개최된 이날 온도탑 제막식에는 이낙연 전남지사, 장만채 도교육감, 백승호 전남지방경찰청장 등 전남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도민들이 참석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79억5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펼쳐진다. <전남도 제공>

## “국회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 위선”

### 박대통령, 국무회의서 비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의원들에게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 하나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직

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과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한다”며 “우리의 경쟁국들이 발 빠르게 서비스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마을장학금 5개시 독차지 ... 농촌학생 혜택 못받아

### 우승희 전남도의회

전남도내 22개 시·군 새마을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자의 절반을 5개시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당 장학생을 새마을지도자 수의 일정비율 이내로 조정할 정권 규정도 무시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라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를 근거로 전남도새마을회를 통해 각 시·군 새마을지도자 자녀 170여명에게 매년 2억원 안팎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 장학금 수혜자 몫을 도시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순천시 74명을 비롯해 목포 71명, 여수 51명, 광양 36명, 나주 22명 등으로 5개 시에서



254명이 장학금을 받아 전체 수혜자 539명의 47.12%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완도는 3년간 5명으로 수혜자가 가장 적었고, 장성 9명, 담양 10명, 화순·곡성 11명, 진도 12명, 구례 13명, 함평 14명, 장흥 16명 등 군지역 상당수가 20명을 넘지 못했다.

새마을지도자 수 대비 장학금 수혜자가 5%를 넘는 지역은 목포(지도자수 7.2%, 장학금 15.4%), 순천(9.9%, 13.7%), 여수(5.0%, 9.7%), 광양(5.7%, 8.0%)로 모두 도시지역이었다. 장학금 수혜자가 5%를 못받는 지역은 나주, 담양, 곡성, 고흥, 해남,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등 9곳이었다. 특히 완도의 경우 지도자 대비 장학금 비율이 0.6%에, 화순·진도·장성 등은 1.1%에 불과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외빈전용 수리채 한달 2번 회의실 사용”

### 권 옥 전남도의원

당초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전남도청을 방문하는 외빈을 접대하기 위해 건축된 수리채가 각 실과 회의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나마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실로 문 열 뿐 나머지 기간은 폐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 권옥의원(목포2)은 2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리채 사용 현황을 지적하고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청사 뒷편 전남지사 공관 앞에 위치한 수리채는 지난 2006년 17억6000여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



축된 한옥건물이다. 수리채는 외빈 접대를 위해 건축됐으나 지난해 도청 각 실과 회의실로 30여 차례 사용됐을 뿐 나머지 기간은 폐쇄돼 있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사용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수리채는 고급 한옥건물로 숙박시설과 주방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개방시 한옥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며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을 살려서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공간 활용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3000억 들여 여수 죽림지구 택지개발 나선다

### 내년 2월 사업 승인

### 수요자중심 중·소형

전남개발공사가 사업비 3000억원 규모의 여수시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나선다.

전남개발공사는 24일 “지난 20일 이사회가 ‘여수시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건

을 승인해 내년 2월 전남도의회 승인을 거쳐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죽림지구 택지 개발 사업비는 3000억원 규모로, 민선 6기 들어 최대 규모다.

전남개발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죽림지구를 포함한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죽림지구의 사업성이 가장 높아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개발공사가 2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신규사업은 전남

도의회 상임위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 2018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9년 착공할 예정이다. 택지 개발 면적은 112만6000여㎡로, 택지 개발 완공 시점은 2021년이다.

현재 웅천지구와 죽림지구 등 여수시내 신규 택지지구 아파트와 상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남개발공사의 판단이다.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행복주택 등 정부와 전남도의 복지정책 수요에 충실하면서도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며 “개발공사 주력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중·소형택지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사는 죽림지구 외에도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군 일운읍 망월리 일대 270만 2000㎡ 규모에 2만1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오룡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람중심·생명존중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